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지 면) 12. 22.(금) 조간
(인터넷) 12. 21.(목) 12:00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돋보기〕

생활 속 골목규제부터 덩어리 규제까지, 규제를 뽀개다!

- ’23년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규제혁파를 위한 노력
- ‘중소벤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를 통한 규제혁신 체계 구축부터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를 통한 △ 총 1,193건의 규제발굴, △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개사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도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했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를 발족했다.

전담조직(TF)를 통해 총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판정단을 도입하여 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 5월 생명공학(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총 4차례에 걸쳐 300여명의 국민판정단과 함께 19개의 핵심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뽀개기를 통해 논의됐던 과제 중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안면정보에 대한 인공지능(AI) 학습 허용'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적지위, 주행기준과 안전기준 부재 등 덩어리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경우 국조실 규제심판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안면정보에 대한 인공지능(AI) 학습의 경우, 개인정보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했다.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등 비정형데이터도 해당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하고, 과도·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약 283만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208억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간 생명공학(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중 양돈농가에 대한 적용 기준을 2만두에서 2만 5천두로 상향 조정하여 양돈농가가 부담해야 했던 생명공학(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비용 약 187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임동우 (044-204-7350)
		담당자	사무관	류지혜 (044-204-735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규제뽀개기 주요 논의과제(총 19건)**

□ 1차 뽀개기 과제 (6건)

과제명	건의내용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 진입시 디지털 치료기기 인허가(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이후, 사후 재평가 절차(신의료기술평가) 등 중복 절차 존재
화상투약기	▸화상투약기 품목(11개) 및 실증 대수(7대) 확대 필요
분산형 임상시험	▸분산형 임상시험에 대한 명확한 지침·법령 부재로 제도 활성화에 한계
비대면진료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범위와 개념 정립 필요(의료법 34조)
웨어러블 의료기기	▸병원 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웨어러블 기기 사용시 의료수가 마련 필요
휴대용 엑스레이	▸응급상황 시, 이동형 방사선 발생장치의 취급자 허용범위를 의사·간호사·'방사선사'에서 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응급구조사'까지 확대

□ 2차 뽀개기 과제 (7건)

과제명	건의내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카페 허용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 허용
생체정보 활용한 동물 등록	▸비문 등 바이오 인식기술을 활용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화물용 전기자전거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를 위한 안전기준, 법적지위, ·주행기준 마련
장애인 접근성 향상 키오스크 설치부담 완화	▸'25년 1월부터 바닥면적 50㎡ 미만인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접근성 향상 키오스크 설치 의무 관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
화장품 리필 판매	▸화장품 단순 소분 시 조제관리사가 상주하여야 하는 의무 면제 요청
사료 혼합 판매 허용	▸사료관리법상 인증받은 완제품 형태의 사료를 단순 혼합하여 용기에 제공하는 경우 사료제조업 허가 면제
전통주 인정범위 확대	▸전통주 제조시 인접 소재지 외 원료도 일부(5%) 사용 허용

□ 3차 뽀개기 과제 (3건)

과제명	건의내용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준수 의무 완화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미래자원으로 분류하여 법정 보관기간(30일)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필요
안면정보 AI 자율주행 영상정보 활용	▸배달로봇의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촬영된 얼굴영상에 대한 AI 학습 허용
수소선박 연료전지 기준 마련	▸수소연료전지 잠정기준에 대한 명확화 및 방폭기준 관련 기준의 현실화

□ 4차 뽀개기 과제 (3건)

과제명	건의내용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추진	▸영세 숙박업소의 객실 가동률이 낮은 경우에도 각 방에 설치된 TV 수상기 전부에 대해 수신료 납부하는 요금체계 개선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정육점 등에서 식육가공품(곰탕, 소시지 등)을 식육과 함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시 필요한 신고(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면적(26.4㎡ 이상) 요건 완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안전상비약 판매자 요건 완화(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

참고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개요

□ 개요

○ **규제 신설·강화 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 사전 차단**('09.1월 시행)

□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국무조정실)

□ 주요 내용

○ **(각부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병행 분석하여 **국조실(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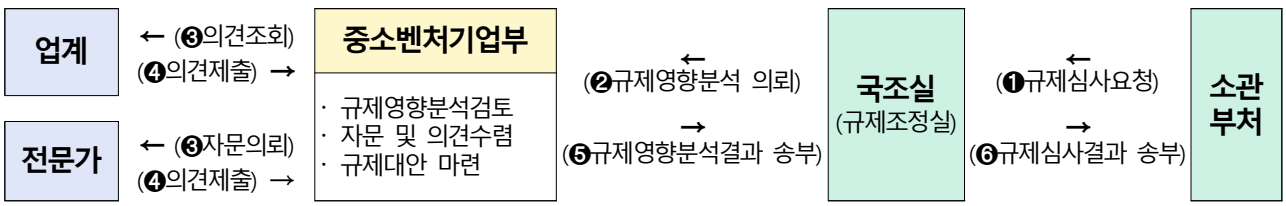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後,**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 등을 분석**하여 **국조실에 검토의견 제출**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기업규모별 차별화, 과다할 경우 완화, 규제 이외의 대안제시 등의 검토의견을 마련

○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검토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공정위(경쟁영향평가), 국표원(기술규제 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운영체계도 >



참고3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주요 사례

① 규제 신설 차단을 통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규제명 (부처명) 법령명	피규제자수		규제완화 내용
	업종	수혜기업(개)	
제작·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이륜자동차 제조·수입업체	11	규제 신설 차단
소형 소각시설 설치 제한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소형 소각시설 제조업자 및 시설 운영 사업자	21	규제 신설 차단
중대사고 발생 업체의 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의무 (국토부) 공항안전 운영기준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	49	규제 신설 차단
금주구역에 음식업자 주류 배달 금지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음식과 함께 주류배달이 가능한 음식업자	640,000	규제 신설 차단

②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한 규제순응력 제고

규제명 (부처명) 법령명	피규제자수		규제완화 내용
	업종	수혜기업(개)	
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 강화 (해수부)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친환경수산물 민간인증기관	3	시행시기 유예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설정 (환경부)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생산및이용촉진법시행령	양돈논가	8	규제 대상 축소

③ 규제내용의 명확화 · 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

규제명 (부처명) 법령명	피규제자수		규제완화 내용
	업종	수혜기업(개)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산정 (특허청)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상표전문기관	15	인력운용 불확실성 해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문화부)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99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대상 및 기준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자	–	자료제출 요구 삭제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소유자	2,191,000	벌채구역 이격거리 기준 부담 완화